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농해수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열어

지난달 29일, 한농연중앙연합회 이홍세 정책부회장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농민단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문제를 놓고 언제까지 '신·경분리'를 이뤄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현재 농림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신·경 분리 시한을 못박지 않은 채 농협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경분리 계획을 수립,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해 농협개혁의 최대현안인 신·경분리 시한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림부와 농협은 공청회에서 신·경분리 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즉각적인 신·경분리 시행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장대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신·경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한다"며 "다만 분리 시한의 법제화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만큼 분리 시 필요한 추가자본금 규모, 지배구조 형태 등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홍세 한농연 정책부회장은 "정부안은 신·경분리를 지연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신경분리 완료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농민조합원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회원조합과 농협중앙회가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라는 것이다."며 "신경분리의 제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농민단체나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도 "현재까지 경험에 비춰볼 때 신·경분리 시한을 정하지 않은 어떠한 농협법 개정안도 신·경분리를 피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신·경분리는 농협중앙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농특위 제13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식량자급률, 직불제 등에 대한 논의 이어져

지난 1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신명운 중앙회장 대행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가 개최한 제 13차 본위원회에 농민단체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방안, 직접지불제 확충 및 체계화방안,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방안, 농어촌 경관협약제도 도입방안, 농어촌 초등학교원 확보 지원방안, 수산업 유통체계 선진화방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방안 안건에 대해 신명운 대행은 "향후 식량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한 식량안보



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해야한다"며 "추곡수매제와 별도의 식량 안보용 공공비축제를 도입해야하며, 쌀을 중심으로 한 남북농업교류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식량자급률 목표달성은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농업인·소비자 등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생산과 함께 바람직한 식생활 모형개발 등 소비분야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직접지불제 확충 및 체계화방안 안전에 대해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장은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병행하여 정부는 농업구조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농업인도 안전농산물 공급 등 기본적인 책무를 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명운 대행은 "쌀을 포함하여 개방으로 피해가 되는 주요작목 뿐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직불제 등도 도입이 되어 농가 생활의 최지선을 보장해야한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내년도에는 농촌교육 및 인력 육성문제를 중점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오늘 의결된 과제에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농어업특위 내에 쌀 소비 촉진 범국민 운동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원석 위원장은 "그 동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임에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오늘 최종 합의를 도출한 것은 협치 농정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직불제' 토론회, "품목별 목표소득지지제 도입을"

정부가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방 등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농가의 불안정한 소득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별 목표소득 지지제도 도입 등 선진국형 농가소득안정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농연 부설 농업정책연구소(소장 이현목)와 한농연중앙연합회,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으로 지난 14일 aT센터에서 개최한 '직접지불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직불제 관련 정책을 이와 같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외에 직불제 확충으로 농가의 이전수입을 확대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명운 한농연중앙회장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논농업직불제 외에는 전반적인 농가소득

대책이 없다”면서 “미국이나 EU처럼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직불제를 강화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소득을 보장해주는 목표소득지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농협조사연구소 통상연구실장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직불제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농민들의 주장처럼 쌀 목표가격 설정시 생산비 인상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소득보전비율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향후 10년간 정부의 새로운 농정방향을 담고 있는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 손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개최되어, 주요한 논의사항은 정책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산하연합회 소식

경기도연합회, ‘친환경농업으로 새 활로 모색’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염동식)는 지난달 25~26일 포천 베어스타운과 경기북부 슬로푸드마을에서 관광농업분과 연찬회를 개최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경기농업·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동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처장은 “도시민의 욕구에 부응한 농업·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규모·가족농 위주의 한국적 농업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도·농 녹색교류사업의 내실추진이 집중돼야 한다”면서 “농촌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외에 놀이와 교육·체험·휴양 등의 공익적 기능을 재발견해 상품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목 팔당생명살림연대 전(前)회장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방안은 친환경농업 정책이 제일 우선돼야 함에도 기초·광역단체장들의 의식 부족이 장애가 되고 있다”며 “쿠바와 양평처럼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희생 위해 ‘매력 있는 농촌’ 만들어야

“매년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농이 공유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달 30일 전주 코아호텔에서 사단법인 전북지역발전연구소(소장 이상휘-전북대 교수)주최로 열린 '한국농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농연전북도연합회 임선택 회장의 지적이다.

이날 임 회장은 "현재 농촌의 젊은 인력인 40·50대가 부채의 주를 이루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 농업의 현 상황에서는 어떤 작물을 생산해도 이자 갚을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부채만 늘어 결국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에 따라 "산간부 지역의 경우 과감히 벼농사를 없애고 편안한 공간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민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학계, 농민이 서로 힘을 합쳐 도시민과 농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 미래 농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강수 고창군수는 정부의 규모화 정책에 대해 "고창군의 농업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22%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농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계농업이 어렵다"며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젊은 도시민을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아이템을 내놔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며 "농민들은 지금 의욕상실과 심적 포기 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농촌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경쟁력 개척자는 고품질

감귤산업을 비롯해 제주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품질 생산과 유통체계 개선, 대형 물류센터 건립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30일, 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문시병) 주최로 제주대 감귤화훼기술센터에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주농업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실화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맞서 제주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의식 전환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혁재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장은 "감귤농업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며 "생산자 통합과 농협 대형화 등을 통한 유통체계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철희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감귤산업은 과도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유통명령제 실시를 계기로 품질위주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책이 완전 정착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인과 농업 유관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허인욱 제주대 명예교수는 "일본은 지난 1999년부터 한·일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준비를 시작하면서 자국의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의 준비는 너무 부족하다. 지자체와 농협 등은 기본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하고 농민들도 유통명령제 등 관련 지식

을 습득하면서 단합해야 일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선 제주대 명예교수는 “1990년 이후 농업은 수량정책에서 품질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수량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농협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 유통방식 도입과 경영혁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청와대와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정책의견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농연서귀포시연합회 경기도에서 감귤홍보판촉 활동 벌여

한농연서귀포시연합회(회장 진대호)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도 용인농협과 용인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감귤 홍보 판촉 활동을 가졌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 둔화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 지 현황 파악을 겸한 홍보 판촉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한농연서귀포시연합회 진대호 회장은 “서울보다는 대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울 인근지역의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경기지역 소비자를 겨냥한 홍보활동에 치중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감귤 판촉 행사에 나선 한농연서귀포시연합회는 앞으로도 도·농 교류차원의 소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시·군 동시다발 농기계 반납투쟁 벌여



쌀 관세화유예협상이 막바지로 치닫해 가운데 농민들의 쌀 개방반대 운동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 9월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었고 11월에는 대규모 상경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트랙터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농민들은 지난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주도로 75개 시·군에서 3000여대의 트랙터를 동원해 ‘시·군 동시다발 농기계 반납투쟁’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개방협상은 무효”라며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경식 전농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쌀 협상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식량자급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못해 결코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역시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밀실흡상을 규탄하고, 전면 재협상 실시 등을 촉구했다.

또한 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도 지난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실에서 쌀 협상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근처인 서울 종로구 옥인동 범혜사 앞에서 문경식 전농 의장과 각도연맹 의장 등 20여명이 무기한 거리농성에 들어갔다.

농민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라고 내놓은 안을 보면 우리쌀의 붕괴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일방적 독단적 밀실패 협상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한국 농업을 송두리째 파탄시킬 잠정적 쌀 협상안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문학의 밤, 농촌 현실을 작품으로 표현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문화예술인들이 농촌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작품으로 표현하는 ‘전국 농민문학의 밤’ 행사가 전남 화순을 비롯하여 강원 화천과 경남 김해, 경북 영천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각 지역 농민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소설가 이경자씨, 연극인 송현수씨, 미술가 송영민씨, 영사활동가 김성일씨 등 국내 시, 소설, 사진작가, 문학인들이 5박 6일간 농민과 생활하며 직접 체험한 농촌현실을 문학으로 알렸다.

농민문학의 밤 행사 관계자는 “쌀 협정 과정을 지켜 보면서 농촌현실이 심각하다는데 공감한 민족문화작가회의 제의로 농촌현실을 반영한 문학작품이 부재한 실정에서 농촌의 현실을 알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민문학의 밤 행사 관계자는 “쌀 협정 과정을 지켜 보면서 농촌현실이 심각하다는데 공감한 민족문화작가회의 제의로 농촌현실을 반영한 문학작품이 부재한 실정에서 농촌의 현실을 알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의 송경동 대표는 “참여 문인들의 보고서와 사진 등을 모아 르포집을 출간하고, 앞으로 작품 활동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화순농민회 회원 차금자(도암면)씨는 창작시 ‘땀방울’을 통해 수입쌀 수입농산물이 늘어나,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그나마 농촌을 지키던 노인들조차 떠나가면, 마을과 농토가 사라져 결국 우리 쌀, 우리 농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이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해 뼈아픈 질책을 했다. **민농연**

특히, 화순농민회 회원 차금자(도암면)씨는 창작시 ‘땀방울’을 통해 수입쌀 수입농산물이 늘어나,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그나마 농촌을 지키던 노인들조차 떠나가면, 마을과 농토가 사라져 결국 우리 쌀, 우리 농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이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해 뼈아픈 질책을 했다. **민농연**